

<div>더불어</div> <div>민주당</div> <div>정책위원회</div> <div>2024.9.26.(목)</div>	<div>보 도 자 료</div> <div>담당: 정책위원회 연락처: (02)6788-2606</div>
--	--

2024년 세수결손 및 대응방향에 대한 민주당 입장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촉구 세수결손시 추경의무화 등 제도개선 제안 및 재정청문회 실시

□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결손이 △29.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 또다시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해 중동발 대외불안이 상시화되고 기준금리 3%대의 고금리였던 2000년대에도 지금처럼 세수결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석열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

* 국세수입 최종예산과 실적치 차이(조원)

이명박정부 ('08) 1.7 ('09) 0.5 ('10) 7.3 ('11) 4.7 ('12) -2.7

박근혜정부 ('13) -8.5 ('14) -10.9 ('15) 2.2 ('16) 9.8 ('17) 14.3

문재인정부 ('18) 25.4 ('19) -1.3 ('20) 5.8 ('21) 29.8 ('22) -0.7

윤석열정부 ('23) -56.4 ('24전망) -29.6

□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교육청까지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정책 실패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집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

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 지난해 세수결손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정부가 세입규모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출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결손의 부담을 또다시 지방정부와 일선의 교육청에 전가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한 데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 첫째, 정부의 자구노력 이상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 둘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 셋째,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안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다.
-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9. 26.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 성 준**